

중요한 건 사회대전환 사회대전환 후보 권영국을 지지하자!

이래로부터

제135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특별호

발행일 2025년 5월 1일

발행 이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홈페이지 leftjo.kr

윤석열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123일 간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사회대전환을 요구해온 노동자·시민의 성과다.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 사회는 단숨에 대통령 선거에 몰입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만 교체한다고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었던 우리 사회의 허약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은 의회를 부정하고 행정권력을 절대화 하고자 했으며 음모론과 반지성주의로 대중을 동원했다. 모두 파시즘의 속성이다. 윤석열이 없어진 다 해서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파시즘적 준동이 사라지지 않는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극우 세력을 성장시킨 그 토대 자체를 무너트려야 한다.

극우세력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극우 대중운동 성장의 밑바닥에는 경제적 위기가 놓여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경기 침체는 고비를 넘기면 호시절이 돌아오리라 기대할 수 있었던 과거의 침체와는 다르다.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은 2% 수준에 불과하다. '장기 저성장'은 우리 사회의 기본 전제다. 그러나 자본을 투자한 대가로 얻는 자본소득은 성장률을 크게 넘어선다.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2%였지만 미 S&P500 지수는 23.3% 상승했다. 성장이 멈춰도 자본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소

득이 제자리거나 줄어듦을 의미한다. 이때 각 개인들에게는 자본소득 추구에 동참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우리 사회를 휩쓴 주식, 코인, 부동산 열풍의 배경이다. 자본소득은 생산에 기초하지 않은 불로소득이다. 일하는 시민의 노동소득보다 주식, 코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장려하는 사회에서 구성원이 사회를 신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극우 운동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 자라났다.

성장의 한계와 자본소득 추구라는 경제 현실 앞에서 한국의 거대 양당은 차별점을 갖지 않았다. 특히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 어느 때보다 자산 격차가 확대되었고, 정부 주요 인사들이 자본소득을 적극 추구했음이 알려지면서 이들이 내세우는 '민주'를 향한 대중적 신뢰가 하락했다. 극우세력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며 영향력을 확대했다.

극우세력이 중국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를 공격하며 세력을 확장하는 배경도 마찬가지다.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때 그 책임을 특정 구성원에게 전가하는 혐오와 차별이 등장하곤 한다.

필요한 건 정권 교체가 아닌 사회대전환!

우리는 단지 윤석열 파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등장하게 만든 사회를 고치기 위해 광장에 모였다. 우리는 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나라가 책임져야

할 돌봄은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사회를 그대로 둔 채 대통령만 바꾸고 싶은 게 아니다. 우리는 구성원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의 역할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

8년 전, 문재인 정부와 지지자들 역시 '나중에'를 외치며 광장의 개혁 요구를 무산시킨 바 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앞세우며 광장에서 제기된 각종 사회대전환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태가 전개되는 와중에도 국민 의힘과 감세법안을 합의처리 했고, 반도체특별법도 마저 합의처리 하려다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보류했다. 부자와 재벌 지원에는 손을 맞잡으면서 입으로는 '내란 종식'을 부르짖는 건 내란 사태를 정쟁으로 격하시키는 꼴이다. 내란 청산은 사회대전환을 뒤로 미룬 인적 청산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양당 바깥 선택지가 있다!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자!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내란 세력 심판이라고도 한다. 그렇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정당"이라고 밝히며 이승만, 박정희 묘를 참배했고 윤여준 등 국민의힘 계열 정당 인사를 영입 중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지지를 얻을수록 더 거리낄 것 없이 우경화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대선 정치방침으로 "진보정당의 후보 및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가 진보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다면 지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이 확장될수록 우리 사회의 우경화도 빨라질 것이다.

선택지는 양당에만 있지 않다.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을 선택하지 않은 진보정당과 사회단체, 노동조합이 모여 권영국 후보를 공동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평등, 노동권, 기후정의 등 사회대전환 요구를 전면에 걸고 나선 권영국 후보의 선전은 우리 사회의 우경화를 막는 보루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 공동대응은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노동·사회운동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장에 모여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 대다수는 부자가 아닌 다양한 자리에서 '일하는 시민'이었다. 일하는 시민 대신 부자와 재벌을 대변하는 후보를 선택하지 말자. 차악이 아닌 최선을 선택하자.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를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3월 18일에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해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공습 첫날에만 400명 이상 숨졌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농지를 불태우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합병이 불법이라고 판단했고, 작년 9월 18일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도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개최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매달 두 번째 토요일, 전주 경기전에서 연대집회가 개최된다. 함께 힘을 모아 학살을 끝내자!



[광장 이후의 과제1]

불로소득 장려 사회에는 미래 없어

증세 없이는 경제 위기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는 정책을 살펴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윤석열 정부와 거시경제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덜 쓰기) 정책을 비판하며 확장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증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의 결과 최근 2년간 정부 세수 결손액이 87.2조 원에 이른다. 법인세 세입이 가장 크게 줄었다. 덜 걷고 덜 쓰는 경제 정책의 결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3년 연속 감소하고 자영업 폐업률은 치솟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감세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근로소득세와 기업 감세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법안 역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했었다. 세금은 덜 걷으면 서 나라 살림을 더 카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금융투자소득,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거나 철회하기도 했다. 불로소득 과세 완화는 우리 사회에 불로소득을 장려한다는 신호로 작동할 것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게 불로소득 장려 사회의 의미다. 자산이 자산을 증식하는 불로소득 우선 사회에서 자산 양극화는 나날이 확대되어 왔다. 또한 반도체특별법 논란으로 드러나듯 민주당은 기업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Growth first”를 외치며 집권 후

성장률을 3~4%대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국의 성장률 저하는 자본 축적 고도화, 생산인구감소 등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한다. 구조적 원인을 놓아둔 채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은 대중을 향한 사기에 가깝다. 그 같은 선언은 그것이 불발되었을 때 한국 사회의 우경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위험이 크다.

우리는 ‘저성장’ 자체를 수용하며 저성장이 장기화될 때 사회를 지탱할 버팀목을 마련해야 한다. 그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지대 추구를 문제 삼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제도다. 금융거래세, 자산 과세 등 불로소득 과세를 포함한 누진적 조세 제도 도입이 불가결하다.

의회제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열자

이번 내란 사태는 승자독식 정치체제의 위기이기도 하다. 윤석열 파면 직후 개헌 논의가 제안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응수했다. 그러나 진정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개헌 준비를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2024년 12월 3일 밤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윤석열은 외교, 군, 인사 등 헌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2년 7개월 동안 나라를 망쳐왔다. 윤석열은 임기 초부터 의회를 부정하고 수십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1987년 헌법의 요체인 대통령 직선제 자체가 민주적

선출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의회보다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다. 또한 선출된 1인에게 막강한 행정 권력을 독점 시키는 대통령제는 승자 독식 정치 체제의 근간이다.

선출된 권력이 성공할 것이라 믿고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로 6공화국은 종언을 고했다. 향후 또 다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선출 되지 않는다고 보증할 방법도 없다. 우리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제 자체를 손봐야 한다.

개헌의 방향이 중요하다. 거대양당이 제기하는 “4년 중임제” 개헌은 대통령 권한을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임기만 사실상 8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의회 권한을 축소 조정하자는 반동적 주장을 입에 올리고 있다. **개헌에서 다룰 핵심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의회제 강화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행정부의 독재적 권력 행사를 견제하는 데 있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성찰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의회 비례성 강화와 의원 소환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일부 극우 세력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이 국회 의석 1/3을 차지하는 현실을 교정하지 못한다면 의회제는 온전히 기능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민주공화국’의 운영 원리가 무엇이어야 할지를 담은 개헌이어야 한다. 제7공화국은 공동체가 나라를 공적으로 지배하며, 구성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화국임을 선언해야 한다.

[광장 이후의 과제2] 차별과 혐오로 사라난 극우

차별금지법 있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자!

윤석열의 극우선동은 12.3 내란사태 전부터 계속되었다. 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을 선포하며 구조적 차별은 없다는 날조로 기본 가치를 부정하고 나섰다. 그리고 끝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을 비롯해, 내란 사태 직후부터 광장과 거리로 뛰쳐나온 노동자와 농민, 장애인,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이주민 그리고 여성과 성소수자의 연대와 투쟁이 민주주의를 지켰다.

극우의 준동,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내란의 잔불은 꺼지지 않았다. 내란법의 권한대행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내란수괴 대통령을 배출한 책임을 져야할 국민의힘은 반성과 사과는 커녕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나섰다. 무엇보다 내란 사태 전부터 광화문 집회를 만들고 내란 사태 이후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동했던 전광훈 세력은 여전히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심지어 허위사실을 근거로 중국인을 비롯한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선동의 위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시민들이 입을 모아 내란청산을 외치는 이유다.

내란청산의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세력화한 극우 운동을 끝장내는 것이다.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한 또 다른 주동자 손현보 목사와 추종 세력들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다시 나선다면 다시 규탄행동에 돌입하겠다는 망발을 했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을 극우화하는데 몰두하는 이들의 주요 의제가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등장한 세력이 아니다. 성평등에 대한 공격,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대한 혐오에 근거해 세력을 확장해왔다. 게다가 파업과 집회의 권리를 억압하는 비상계엄을 옹호했듯이 극우세력은 민주초동을 비롯한 노동자운동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극우 세력의 부상을 엄중하게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자민중운동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자!

시민들은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옹호

하고 내란에 동조한 세력과 단호히 맞섰다. 그리고 123일의 광장과 거리의 시간 동안 “모두가 존엄한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의 열망을 외쳤다. 내란사태가 종식된 사회를 향한 시민의 염원, 광장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의제로 차별금지법이 호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와 정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극우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차별금지법 제정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기간, 민주당 집권과 압도적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제를 미뤘다.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 앞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택하였듯, 정치도 더 이상 차별금지법 앞에 우왕좌왕하는 망동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 그 누구보다 평등사회를 염원했던 노동자·민중운동이 시작하자. 정치가 종교를 빙자한 극우세력과 타협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이 현장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을 요구하고 투쟁하자. 윤석열을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 있는 민주공화국, 평등사회의 토대를 함께 만들자!